

의약분업정착을 위해 힘을 합칠 때



李京浩
보건복지부 차관

의약분업은 우리의 건강은 물론 후손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반드시 시행·정착되어야 할 제도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OECD 가입을 통해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후진적인 복약 관행에 머무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그동안 자유롭게 아무 의약품이나 구입할 수 있던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로서는 의약품 오남용의 심각성을 체감하는 데는 둔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항생제 내성률이 가장 높은 것은 그동안 누려온 편리함에 대한 흑독한 대가이며 아마도 당연한 귀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의약분업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30여 년이 넘는다. 그 긴 세월 동안 논의가 길어지고 시행이 유보되면서 우리와 우리의 앞선 세대들은 계속 의약품 오남용에 노출되어 왔으며, 알게 모르게 건강을 해쳐온 것이 사실이다.

오랜 기간동안 굳어져 온 사회적 관행을 당위성만으로 바꾸어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세대에 걸쳐서 노력해야 할지도 모

른다. 의약분업을 통해 우리의 보건의료 수준을 선진화하는 일이 바로 그러하다 하겠다. 2000년 7월 의약분업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참으로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시행 이후에는 의료계의 파업과 같은 엄청난 사회적 고통을 겪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의약분업이 시행됨에 따라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처방과 약사의 조제·투약을 통해 의약품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국민 보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틀을 비로소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의약분업은 그야말로 국민의 의료문화를 변화시키는 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효과를 우리가 체감하는 데

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약이 있음에도 시행 1년 여 동안에 나타난 의미 있는 변화들을 통해 의약분업의 효과를 확인해 볼 수는 있다. 우선 연간 1억 7천만 건으로 추산되던 약국에서의 임의조제가 금지되었다. 이로써 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판매되던 전문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대표적 오남용 약제인 항생제와 주사제의 사용량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통계를 보면 의원의 청구건당 항생제 및 주

사제의 품목수가 의약분업전에 비해 각각 23.3%, 31.2% 줄었다. 항생제 및 주사제를 원외처방 받은 환자수도 2001년 3/4분기에는 2001년 2/4분기에 비해 각각 12.8%, 47.2% 감소하였다. 그밖에 스테로이드제의 경우에도 의원의 청구건당 품목수가 의약분업전에 비해 10.5% 감소하였다. 이러한 통계치들은 의약분업이 초기의 우려와 달리 서서히 그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한편 의약분업의 시행으로 의료비가 상승하고 보험재정의 부담이 증가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이는 병원 환자의 증가나 고가약 사용으로 인한 약제비 증가 등 의약분업의 시행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라 하겠

의약분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전문적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한편 문제점을 꾸준히 보완해 나가며,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을 위한 과제들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으나 그 이 외에도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지출이 더 많이 증가해 온 그간의 건강보험제도의 구조적 적자요인과 의료대란 과정에서 의료원가를 반영한 의료수가의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에는 과거 임의조제 시 국민이 약국에 전액 지불하던 약품비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되며, 진료비의 자연증가 요인 또한 그러하다. 정확한 진단·처방과 안전한 조제·투약을 통해 전문적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용증가는 필연적이라고 보아야 한다.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증진시키기 위한 투자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의약분업 전에 만성 소화불량 증세로 전문적 진단 없이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여 복용하던 환자가 의약분업에 따라 의사의 진단 결과 위암으로 판명되어 완치된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약분업 실시로 인하여 조금은 불편하고 진료비가 다소 오르더라도 큰 불행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작년 5월부터 추진한 재정안정대책을 통해 재정적자 1조 8천억원을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을 뿐 아니라, 지역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50%를 확보함으로써 매년 3조원 이상의 재원을 지원받게 되어 어느 정도 안정되게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작년의 우려와는 달리 그 동안의 추진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더욱 노력한다면 2006년까지 보험재정을 건전 기조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최근 사회 일각에서 의약분업의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우리와 후손들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실현·정착시켜야 할 의약분업이었다는 점을 상기할 때 무리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겪었던 엄청난 고통을 국민에게 또다시 안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의약제도의 기본틀을 다시 짜는 데 따르는 혼란과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의약분업의 철폐는 당위성에 있

어서나 현실적으로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겠다.

의약분업의 안정적인 정착이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과제이다.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전문적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한편 문제점을 꾸준히 보완해 나가며,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을 위한 과제들을 충실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의약분업은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건강을 위한 백년대계이다. 정부와 의료계 및 약계는 제도의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함으로써 국민을 안심시키고 의약분업이 국민을 위한 제도로 성숙되도록 노력할 책무가 있다. 대립과 갈등보다는 '국민건강'이라는 대의 속에서 서로가 양보하고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때다. ■